

◎丙申年 친환경농산업 회고와 丁酉년에 달라지는 제도



2016년은 친환경농산업계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농자재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가 이어졌던 해였다. 저농약인증제가 1월 1일자로 폐지됐으며,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GMO 논란도 뜨거웠다. 한편 친환경농자재는 영세율 적용문제, 비료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에 따른 유기농자재사무 농관원 이관 및 공시제로 일원화 등 친환경농산업 분야의 丙申年의 이슈를 되짚어 보고, 丁酉년에 달라지는 친환경농산업 제도를 알아 본다.

1. 2016년 친환경농자재 산업동향

“농산물 가격안정이 안되면 후방산업인 농자재산업 성장도 발전도 없다”

① 비료

식물영양제시장은 4종. 미량복비 중심으로 2000억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전년 대비 약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매년 큰 변동없이 농약살포시 영양제 또는 기능성비료로서 주로 혼용 사용되고 있지만 40여 업체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하여 급격히 레드오션화 되어 가고 있으나, 국내 기술력이 높아 중국 등 동남아권에서 인기가 있어 일부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전망도 밝다.

**유기질비료**는 정부 보조지원 지속(1600억) 및 농민선호도 증가로 연320만톤, 8000억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업체와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유박비료 106곳과 퇴비 416곳 등 모두 522곳이다. 올 농협공급계약에서 20kg들이 한포대당 평균 유박비료 235원, 퇴비 30원이 가격이 깎였다. 한정된 수요를 두고 유박비료는 농우바이오 및 대형화학비료업체들이 진입하는 한편 퇴비업체는 연 30여개씩 늘어 나고, 퇴비,유박비율이 85:15에서 77:23%로 유박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갈수록 양 업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문류비 부담 때문에 일부 소량에 그치고 있다.

**무기질비료**의 국내 1ha당 사용량은 2000년 381kg에서 2014년 258kg으로 줄어 생산량도 ( '90) 240만톤에서 ( '15) 110만톤으로 준 1조6천억 수준으로 공장 가동율도 60% 수준에 불과하다. 내수 한계 봉착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안되고 있는 데다 농협 자회사가 50%를 점유하고 있어 타사와 마찰도 지속되고 있다. 대북지원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과당경쟁입찰에 의한 가격인하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수출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져 ( ' 11) 164만톤을 정점으로 ( '13) 143만톤, ( ' 15) 88만톤으로 추락하고 있다. 거기 다 복합비료 수입량은 ( ' 11) 18만톤 ( ' 15) 22만톤으로 국내 수요의 14%에 이르는 물량으로, 수요감소로 위기에 처한 비료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이스라엘·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 '11) 1만8천톤 ( '15) 2만3천톤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선진국 수입복합비료는 고품질의 양액재배나 관비용으로, 가격이 국내산 복비의 3~4배에 달할 정도로 값이 비싸도 효과가 좋아 농가 선호도가 높다. 우리 시설재배 작목에 맞는 고품질 양액 및 고기능성 복합비료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② 생물 농약

생물농약 시장은 급속히 위축되어 100억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효과저조로 농민선호도 저하, 고 개발비용, 지자체 무상공급 마찰 등으로 개발 의지도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우수한 생물농약은 세계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보조지원 확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화학농약** 출하량은 지난해 1만8천톤 대비 5%정도 감소했지만, 단가가 높은 저투입 신제품 농약 판매가 늘어 매출액은 3%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농약 사용량은 줄어 들어 매출액은 정체상태이나 메이저사들은 신물질 개발이 안되고 후발 제네릭업체들은 원제 개발 능력이 없어 기존 원제를 활용한 혼합제 개발에 몰두 짝퉁 신제품을 출시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이다. 갈수록 규제는 심해져 잔류 GLP 도입에 따른 시험비 증가로 혼합제 신제품 개발도 중단될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감을 이용 교묘히 농약등록 및 유통을 교란

시키는 파렴치한들이 있어 내년에도 글라이포세이트 및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및 시험관리 등의 규제는 지속 강화될 것이다. 한편 농약 수출입은 2015년 농약 수입액이 2014년대비 7.2%가 증가해 농약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한 반면 2015년 수출액은 1억1055만달러로, 2014년 대비 2.9% 감소했다. 올해는 신젠타가 2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는 순수한 수출로 보기 어려운 아시아존 전수배 물량이 대부분으로 수출 가능한 국내 원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③ 유기농업자재

세계친환경농업은 년 20%이상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친환경농업은 저농약이 폐지됨에 따라 2016년 인증농가수가 12%가 줄고 국내 친환경농산물 충성·신뢰도 저하에 따라 출하량은 -20%, 전체 농산물중 비중도 4.5%까지 추락하는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후방산업인 친환경농자재 시장도 동반 침체됨은 물론 독자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비료 및 농약 시장과 연동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원료중 아바멕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성분이 제품에서 빠져 나감에 따라 효과가 저하되어 농민선호도가 급격히 위축되어 2014년 7월농약검출 파동이후 침체가 이어진 한해였다. 다만 2016년 유기농업자재중 농약검출은 1건뿐으로, 이제는 농약 검출 파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식물추출물 원료에서 “피페로닐보톡사이드”라는 효력증진제 성분이 검출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병해충관리용자재** 시장은 1200억 정도로 전년대비 5~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농약이 급속히 병해충관리용자재로 대체되다가 근래 농약검출 파동으로 식물추출물 병해충관리용 유기자재도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농약은 세계적 추세 및 보조지원 확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시장**은 1500억원 정도로 정체된 반면 수용성규산, 부식산, 아미노산 및 해조류 추출물 등 기능성 비료 위주로 연 5%정도 증가 추세이다. 이처럼 기능성이 크거나 특수기능을 지닌 비료 수요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서 향후 수출전망도 밝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도 우수한 고기능성 복합제품 개발이 요망된다.

#### ※ 바이오 비료 및 생물농약 미래시장전망

확대 요인	저해요인	미래시장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회복시 환경 관심고조</li> <li>▶친환경농식품 수요증대</li> <li>▶세계시장 트렌드적 상승</li> <li>▶기능성 미량요소비료 및 유기질비료 수요 지속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친환경농산물 퇴보</li> <li>▶효과미흡 농민선호도 저하</li> <li>▶가격 비교적 고가</li> <li>▶연구개발 성공률 저조 및 등록 개발비용 과다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시장 상승추세에 부합 국내시장 머지않아 선호도 회복 상승추세 전환</li> <li>▶유기농시장 2~3년내 회복</li> <li>▶해외서 국내제품 인기상승, FTA 발효로 수출 활성화 전망</li> </ul>

## ● 내년도에 달라지는 농자재 관리제도

### ① 유기농업자재의 영세율 적용

지난 15일 한친농 확대회의에서 허용물질 적용우선순위에 자사위주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으나, 당회는 사용량 위주 우선순위 원칙을 정하고 대부분 허용물질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지속 기재부가 최종검토중에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적용확대 해 주기로 기재부가 세법소위에서 약속한 사안이므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용확대될 것으로 본다. 연말까지 부가세영세율 시행령 개정작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나 시국이 어수선한 관계로 대통령령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확대방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기재부의 대통령령 개정작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년부터 소급 적용되리라고 본다.

###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인증제 통합="공시제+효과 자율표시"로 개정

친환경농어업육성법률 국회통과(11/17)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으로 6.18일부터 시행된다. 품질인증제폐지 공시로 일원화하되, 효과 시험 성적 첨부시 병해충명 등 효과를 자율 표시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은 6월18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자율표시방안 협의회결과(12.15) 등급제는 고성이 오갈만큼 대다수가 반대하였고, 보증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포장수, 방제가 등 자율 표시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

### ③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지침 개정 제도개선

사업예산은 소액에 불과하나 지자체 보조사업기준이 되므로 파급영향이 크다.

- 친환경농가 자부담율 개선 (현행) 농가 자부담 50% ⇨ 자부담율 20% -예산 31억(녹비종자 7억, 천적 및 원료 각 3500만원, 유기자재 25억 집행)
- 유기질, 토양개량제 및 자가제조 원료 등 타 정부 지원품목은 본 사업 배제
- 공시때 원가계산서 첨부 및 동사업 시범사업 3개소로 확산계획(폐지)
- 부정수급방지제한기준 강화하되 사후검사결과 처분기준은 일부 완화
- ♣ 무농약 이상농가 자재비 지원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논	밭	시설	과수	논	밭	시설	과수
40	80	190	120	30	60	150	100

\*신청( '16) 1~2월, ( '17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 사업과 같이 11~12월

### ④ 유기농업자재 업무이관에 따른 농관원의 2017년 추진계획

(공시.시험연구기관 역량강화)

3개 공시기관 갱신검사, 시험연구기관(41개소) 점검

공시기관 심사원 보수교육 및 공시사업자대상 기준 및 표시방법 교육

(제도개선) 공시.품질인증의 공시제 통합관련 세부기준 마련

공시제품의 효능 효과표시 등 관련 세부기준 마련 검토

\*예시 : 병해충별 방제가 50% 이상에 따른 효능.효과 자율표시방안 등 검토  
(품질관리)

-생산단계조사 : 생산 수입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 전수조사, 중점 판매 시기에 과거 부적합품 생산업체, 미생물 자재업체 집중조사

-유통단계조사 : 지역 인증농산물 출하시기별 유기농업자재 시판품 조사, 공시품 표시사항 점검 등 비유기농업자재 부정유통방자,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중점 잔류농약 분석 실시(800건)

(기반 조성) 인증제 및 유기농업자재 자문기구 구성 운영( '17.2)

-구성 : 정부, 생산.소비자, 대학소속 유기농 전문가

-분야 : 주용 인증기준 제.개정 및 허용물질 신규허용 및 폐지 등 자문

### ⑤ 비료관리법령 개정(국회 계류중인 법개정안 골자)

가. 무상 공급비료가 토양 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공급 비료도 공정규격 준수 하도록 함

나. 유기질, 부산물비료만 수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료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업자가 6개월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바.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비료품질검사 등 관리사무를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나 국회에서 법률안 보류시켰으나 향후 유관기관과 공조 대응할 필요가 있다.

### ⑥ 퇴비 등 비료중 유해물질 검출기준 설정

○현황 및 문제점 : 농관원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축사소독용 살충제, 벧짚.왕겨 사용 퇴비, 해조류추출물 사용 4종 복비에서 극미량의 잔류농약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사례 발생

○식품첨가물기준 : 비의도적감안 신축성(0.1~10ppm) \*hexan 불검출기준 5 ppm

○비료중 잔류농약정량한계 0.05 ppm→ 유해물질검출기준 10ppm 설정을 건의중이다.

## ● 친환경농업육성

### ①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시행('16.4월~)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5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인증제도의 개선으로 농관원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하고 민간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소비확대를 위해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오는 2020년까지 9개소로 확대하고, 조합의 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 구성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 7월에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친환경농가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한 직불금 상한면적 확대,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 상향방안을 검토한다. 재배난이도, 소득감소분을 감안논·밭·과수 3개 품목군으로 분류한다. 저농약 직불금 수령 농가가 무농약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을 추가 지급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한다.

넷째, 유기농전문기술 보급 사업단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행 허용물질(90종)을 전면 재검증하며, 또한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과 목록공시를 통합하고, 자재 관리체계를 농관원으로 이관하되 전문성을 보강한다.

다섯째, 농업환경보전 강화로 전국 농업환경 변화상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은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그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외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변 골프장 등의 고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질 및 수질 오염의 피해를 입어 왔다.

### ③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초·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또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내년도 무상급식 도비 부담률을 전국평균인 14.4%로 정해 1천33억원을 반영했다.

#### ④ 서울 7,000개 공공급식 영역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Non-GMO 우리콩 어울림마당 행사가 3일 충북 괴산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급식에 친환경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박원순시장 등 각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서울시의 7,000여개 공공급식 영역에 지역 농산물을 연결시키고자 약속한 바 있다.

#### ⑤ 전남친환경농업인한마음대회...판로줄고 가치인정 못 받아 농민 한숨

지난달 29일 전남도원에서 열린 한마음대회에 200명이 모였다. 이낙연지사는 “지난 15년간 전남도는 전국 평균의 2배 늘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은 전남도가 끌고 가는 게 영광스런 숙명” 최초로 친환경농가 지속직불금을 지급 중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100% 유기농 쌀을 공급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전남도 친환경농민들은 한숨 짓는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는 늘어나 소득은 줄어든다. 판매처가 적어 우리는 제값을 못 받는데 판매처 중 일부에서 장난치는 것도 심하다. 일부 유기가공업체는 정부는 말로만 6차산업 운운할 게 아니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농정신문기사)

### 4. 2017년 한친농 농자재 수출시장 개척추진

#### ① 베트남농업협회 초청 B2B 미팅

당회/수출조합은 친환경농자재 수출관련 MOU를 맺은 바 있는 베트남농업협회 관계자 5명을 초청해 지난 28일 서울 화훼공판장에서 B2B 미팅을 가지고 친환경자재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Vu Kim Thu 베트남 과학기술부 사무관(VTTC)은 “국제 기준에 맞는 수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고급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농업협회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협력이 지속적 이뤄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농업협회는 20인의 베트남 농업분야 CEO들로 구성돼 있다. \*2017년에는 베트남 농업협회 등과 MOU체결에 따른 본격 수출협력을 추진한다.

**② 중국섬서성 서북농업대학과 친환경자재시범포설치 등 포괄적 교류추진**

- “이따이이루” 양링현대농업국제합작센터와 교류.협작 추진
- 양링고신기술산업시범구 주관 중한합작시범원 설치 : 양링시범구역 우혜정책 혜택부여
- 중국양링농업고신과기성과 농업전시회 개최 한국제품 상설전시
- 서북과기농업대학 주선 중국 서북부업체와 한국업체간 B2B 미팅추진

**③ 중국新大地农业发展有限公司와 MOU체결에 따른 수출협력 추진**

**④ 중국 웨이팡 수광시에 친환경자재 시범포 설치**

**⑤ 키르키즈스탄 정부주관 친환경자재 시범포 설치 및 B2B미팅 추진**

**⑥ 카타르 코라비아홀딩스와 유기농식품/자재 상설매장 설치 추진**

**“한한령(限韓令)” 을 아는가**

한류를 제한하라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즉 禁韓令이고, 한국산 문화와 상품의 수입 중단령이다. 7월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중국 여행자를 20% 줄이고, 한국 드라마·예능 송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부정하지만 한한령은 진행 중이다. 성주 사드부지 연계 롯데 중국사업장 안전·위생 조사. 한국산 제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148건으로 지난해건수(130건)를 이미 넘어섰다. 겨우 중국 문턱을 넘은 삼계탕을 포함한 국산농식품에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 친성혜용(親誠惠容, 이웃 나라들과 친밀하고, 성의를 다하며, 포용한다)는 중국의 대외원칙은 결국 耳懸鈴鼻懸鈴이 됐다. 사드를 두고 중국은 ‘가까운 우리를 두고 왜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느냐’ 고 한하는데, 역으로 묻고 싶다. 언제 가까운 나라와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느냐’ 고(농민신문기사발취)  
..... 우리 친환경농자재 수출에 있어서도 유념할 사안이다.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과 새해 사업번창을 빕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